교토의정서와 국가 경쟁력

현대경제연구원 상무 유병규

지구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연말에 남아시아 일대 해변을 생지옥으로 만들었던 지진 해일은, 지구 온난화가 가까운 장래에 몰고 올 대재앙의 예고편에 불과하다고 환경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미래의 참변을 막고자 오는 2월 16일에 교토의정서가 발효된다. 일단 선진국을 중심으로 산업화의 부산물이자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온실 가스 배출을 1990년 수준 이하로 줄이기 위한 방안이 구체화될 것이다. 개도국으로 분류된 한국 역시 2013년부터는 CO2 배출을 감축해야 하는 처지가 될 게 틀림이 없다.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 구조에다, 소득 대비 에너지 사용량이 세계 최고 수준인 국내 현실에서 온실 가스를 감소시키는 일은 경제 성장 능력 저하로 직결된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국내 경제의 특성상 미국처럼 막무가내로 버틸 수도 없다. 세계적인 각종 환경 규제로 대외 통상의 길이 막혀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지구 환경 보존 비용을 충당할 수 있어야 우리 경제의 경쟁력이 유지 강화되어 지속 성장이 가능하게 된 셈이다. 또 다른 경제 위기 상황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나 기업의 이에 대한 인식과 대응은 여전히 피상적이고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느낌이다.
한국에 적용될 것이 예상되는 2013년까지 보다 종합적인 대응 전략과 구체적인 실행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국 경제의 선진화는 가능할 것이다.

우선 교토의정서 발효가 세계 경제 패러다임이 변하는 또 다른 '역사적 경계선'임을 깨달아야 한다. 21세기 지식 정보화 사회에서 지식을 새로운 생산요소로 중시하듯이, 이제는 환경 요인을 경제발전의 핵심 요소로 포함해야 하는 시대가 열리는 까닭이다. 경제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생활 속의 에너지 효율화 운동이 보다 적극적이며 지속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각 가정의 에너지 절약에 대한 세제와 금융상 유인책을 보다 강화하는 것은 이의 실효성을 높여줄 것이다. 모범적인 환경 도시를 특구 형태로 개발하여 이를 확산시키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하다.

더 나아가 위기를 기회로 삼아 수동적 대응 자세에서 탈피하여 한국 경제를 '청정 산업 구조'로 혁신시켜 나가는 능동적 활용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기존의 중화학공업들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연차별 CO2 배출량, 에너지 효율 수준과 같은 구체적 목

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토록 독려하여 국내 주력 산업의 경쟁력이 더욱 강화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수소 자동차나 재생 가능 연료와 같은 친환경 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설정하고 이를 집중 육성하여 국내 산업의 부가가치를 한층 높여나가야 한다.

농촌이나 산림 정책도 친환경 경제 구조를 뒷받침해주는 방향에서 재정립해야 할 것이다. 벼농사나 삼림은 CO2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하여 환경 경제 시대에 국가 경쟁력을 높여주는 사회간접자본으로 재평가되어야 마땅하다. 유기농에 대한 대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산림청의 기능과 예산을 확대하여 전 국토의 절반 이상이 넘는 산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앞으로 논밭의 타 용도 개발이 확대될 것이 예상되는 만큼 개발 수익금의 일정 비율을 산림 녹화 등에 투자토록 하는 것도 '환경 SOC'를 확충하는 방안이 될 수 있겠다.

우리가 앞서 국제적인 환경 기준을 충족시키면 세계적인 환경 규제에서 자유로워질 뿐만 아니라, 향후 CO2 배출이 급속히 증가할 동북아 지역 국가들에게 배출권을 파는 것을 통해서도 막대한 경제적 실익을 얻게 됨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더욱이 중화학공업 분야의 앞선 청정 기술과 새로운 에너지 산업을 확보해야, 한국은 동북아 지역의 경제 발전을 선도하는 명실상부한 동북아 중심 국가로 부상할 수 있게 된다. 차제에 국가 생존 차원의 환경 친화적 중장기 경제 발전 전략을 새롭게 마련해야 할 필요성과 시급성이 여기에 있다.